

광주·전남 의원들, 통합 속도전·특별법 부실 설계 '질타'

행정통합 압도적 찬성 가결 속 아쉬움 표출…“법안 보완” 한목소리
자치입법권 보장·의원 정족수 확대·의회청사 소재지 명시 등 요구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동의가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숙의 없는 속도전과 특별법안에 대한 부실 설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4일 열린 제3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표결 전 행정자치위·환경복 지위·산업건설위 의원 11명이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시민투표 없이 이뤄지는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표 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국회 발의된 ‘전남광 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안평한(민주·북구1) 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 특

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별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 합에는 찬성하지만,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가 시민에게 무상 양여돼야 하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완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AI 시대 시민 기본권 보장 등 통합 특별법과 후속 조치에 구체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에 대해 통합 이후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걸로는 보기 어렵다.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핵심 조항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주정사 소재 역시 광주로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 합은 단순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통합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통합시의회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민주·광산1)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도시 가치를 지키면서 기능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특별 외정 설립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주장해온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명노(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 합에는 찬성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정무직 부시장 인사청문과 주민발안 확대 등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들의 찬성 의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 학부모연대 등 단체는 “아이들 미래는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전남지역의 교육 특성에 맞는 특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특별법 보완사항을 통합 동의 의견과 함께 제택했다.

강문성(민주·여수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남도의회는 전남과 광주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 현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 ▲ 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 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추진 ▲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

정 ▲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 지역재원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12개 사항을 의견서에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박형대(진보·장흥1) 도의원은 강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토론을 요청하고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제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는 통합찬성만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세우고 사전을 찍는 것이 주요 결과물이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도그마에 갇히고 20조원의 재정지원이라는 숫자 앞에 모두가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 “5·18 헌법 수록,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역량 집중”

광주 방문…전남대 현장 간담회

“2월 중 발의 해야 기회 살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체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 등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후 전남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국민의 의견을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동안 단 한 발도 떼지 못한 낡은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빈틈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국회의원, 윤복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병로 전남대 5·18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내란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2월 중순 이후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 진단하며 “설 전후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담기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성사시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다”고 덧붙였다.

윤복현 이사장은 “5·18 정신 수록은 상징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2월 중 발의가 안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경 대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민병로 소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5·18 당사자들은 정신 수록이 이루어질 경우 근거 없는 왜곡과 편웨이로 별불이지 못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광주가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듯, 이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우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고(故) 배은신 여사의 묘역을 찾아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 한국 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간 협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준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논의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 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서울약품 | 주 Since 1956
일반의약품

원기소플러스 정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원기소플러스는
약국에서만
판매 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모·효소·유산균 복합제제

설명절에는 “원기소플러스”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 줍니다.
- ✓ 유산균은 장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은 혈관을 맑게 해 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여·노·소, 누구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함,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